

민주 “盧 수사는 재보선용 편파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그동안 수사에 몰렸던 민주당이 전면전을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편파 수사를 통한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연차 로비 파문과 관련, 천신일 세종나모여행사 회장의 10억원 수수설, 당비 30억원 대납설, 기획 출국설 등 현 정권 관련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세균 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여론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천 회장은 조사대상이지만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아니다’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 “여당 지도부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검찰이 선거 국면에서 의혹을 살 만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특별검사제 도입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대적 반격은 검찰수사에 계속 끌려가다간 ‘MB 정부 심판론’이 실종되면서 자칫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생중계 하면서 재보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고

현정권 3대 의혹 제기 ... 반격 모드 전환 ‘무소속 연대’ 무력화 시도 鄭에 맹공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내부의 적’인 전 주 덕진의 정동영 후보를 향해서도 맹공을 퍼부으며 뒷밭에서 무소속 연대를 공식화한 ‘친정(親鄭) 연합군’ 무력화를 시도했다.

정 대표는 “정 후보는 결코 넘어서

는 안 되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정 후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전주가 아니라 부평을이고 경주인데, 전주에서 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주 현지에서 강봉균 전주 선대위원장 등 일부 전북 의원 주도로 무소속 연대 비판 기

자회견을 가졌다.

또, 지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에게도 SOS를 요청, 당초 부평을에서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었던 박 의원은 이날 전주로 급파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대표는 손학규, 김근태, 한명숙 고문의 트로이카가 군단과 함께 부평과 시흥 지역 곳곳을 훑으며 지인방식 표시잡기에 나섰다.

또 민주당은 오는 22일 부평을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한편 23일 수도권 원외위원장을 집결시키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재선거 후보들이 20일 오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주 덕진 정동영 후보와 원상갑 신 건 후보의 ‘무소속 연대’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주 원상갑 이광철 후보, 덕진 김근식 후보, 원혜영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노 전대통령 방문조사해야” 민주당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며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 의원은 이날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의 선례가 있는데다 절차상의 문제와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방문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내정치 문제가 아니며, 세계에 비치는 한국의 모습, 국가 이미지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盧 소환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듯

檢, 정상문 10억 혐의 연결고리 찾기 주력

당초 이번 주 후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오는 29일 열리는 재보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20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10억원대 불법자금 조성에 대한 새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 돈이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일단 소환 일정이 다소 늦춰지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재보선에 압박해 노 전 대통령을 부르면 아권으로부터 ‘정치 수사’라는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예 재보선 이후로 소환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검찰은 지난 11일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조사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수차례 불러 노 전 대통령을 향한 ‘600만 달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으며 지난 주 후반 대부분 조사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주말까 정 전 비서관이 따로 차명계좌에 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모아뒀다는 혐의가 드러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는 3억원도 그대로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정 전 비서관과 건호 씨의 새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나 가능하고 재보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구태여 정면돌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여야 “한표라도 더...” 지도부 총출동

부평을 초박빙 ... 거물급 지원 유세 민주, 전주 ‘무소속 연대’에 촉각

4·29 재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20일 인천 부평을과 전주 등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표밭잡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당지도부가 총동원되는 등 선거 열기는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인천 부평을=일부 지역신문 및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재준 후보와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25~28% 지지도를 보이며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이 따라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정몽준 최고위원, 아나운서 출신의 유정현 의원과 함께 아파트 단지과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원혜영 원내대표와 함께 부평구 갈산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19일에 이어 2일 연속 부평을 찾아 홍 후보와 함께 경로당과 시장 등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전주=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주 덕진에서는 무소속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민주당 김근식 후보에게 크게 앞서지만, 완산갑에서는 무소속 신건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이광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장관과 신 전 원장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 후보의 신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진행될 경우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주=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표본 700명, 오차범위 ±3.7%)의 조사에서는 무소속 정수성 후보(33.3%)와 한나

라당 정종복 후보(33.1%)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0.2%p에 불과했다.

그러나 투표 의향층(77.5%)에서는 정종복 후보(38.8%)가 정수성 후보(35.1%)에 3.7%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종복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기류와, 박근혜 전 대표측 정수성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표심이 교차하고 있다.

결국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군소 후보들이 양강 후보와 연대할 경우와, 어떻게 조합되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북구=지난 15일 울산 MBC의 여론조사 결과, 박대동 한나라당 후보가 19%의 지지율로 가장 앞섰지만 17.8%를 얻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 민노당 김창현 후보도 11.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와중에 20일 김, 조 두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진보신당의 승리가 예견되는 상황.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거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운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안돼”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 2차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정부는 무책임, 당정은 엇박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책 혼선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소득양극화에 이어 자산양극화를 불러온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려 함에도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계륜 “민주당 살 길은 연합전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토 중추에 나선 신계륜(사진) 전 국회의원은 20일 “민주당이 현재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각성과 자기반성을 전제로 다양한 ‘연합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제자리 결음을 하는 것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새로 태어나려는 각오가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건전한 보수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다양화된 전선이 어우러진 ‘연합군’이 민주당의 성격이다”며 “이를 살리는 것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권력 투쟁을 위한 분당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성공할 적도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